

‘휴게시간이 곧 무료노동시간’ 주 52시간제의 그늘

# 요양보호사·보육교사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정책제언 토론회

임금 후퇴·휴식권 침해 등  
실질 근로조건은 뒷걸음질  
정부 대책마련 적극 나서야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가짜 휴게시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실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서는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현장 실태 증언 및 정부 담당자들에게 정책을 제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노동자 휴게시간 실태 증언 및 정책 제언’ 토론회 모습. /김종훈 의원

의장은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

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비우체 시간이 줄어들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진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은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제

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며 “시한을 정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하고,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철홍 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형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도 “(보육) 보조교사 6000명을 확보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침개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국민연금 스텐어드십코드 7월말 시행

복지부-국민연금, 도입안 심의의결

국민연금이 스텐어드십코드를 7월 말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투자가가 주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주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날 지 주목된다.

특히 경영 간섭을 우려해 거부감을 보이는 재계의 반발 분위기를 뚫고 투자기업의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 주주 이익도 지키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 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텐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스텐어드십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이 스텐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투자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등 주주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도 주주로서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다.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전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당 확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중고폰 시세조회서비스 ‘스마트초이스’ 실제 도움 될까?

## 비교업체 부족·月 2회 가격반영... 실효 글썽

최고·중간·최저 등급 기준 등  
제품 구체적정보 부족 지적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폰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세조회 서비스를 열었다. 10일 오전 9시부터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문을 연 이 서비스가 과연 실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기부는 중고폰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중고폰 구매 전에 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중고폰 판매시세를 먼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세조회 서비스는 중고폰 모델별 판매가격과 각 모델의 등급별 평균시세 정보를 제공한다. 등급은 업체별 기준에 따르며, 매월 2회(둘째, 넷째 월요일 직전) 주간 업체별 판매가격을 반영해서 갱신된다.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10개 중고폰 업체들의 판매가격을 반영한 결과값이다. 가격 정보제공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중고폰은 시장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구매 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시세조회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기자가 시험삼아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정 스마트폰 중고가를 검색해보았다. 그러자 제품 사진 등과 함께 3단계로 나뉜 등급별 가격 정보가 표시됐다. 그렇지만 일부 사용자는 이 서비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중



과기부 스마트초이스 메인 화면.



과기부 스마트초이스에서 특정 중고폰 가격을 검색한 결과.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 캡처

## 개인투자 제한된 ‘공매도’, 개혁 필요

>> 1면 ‘개미 또 당했다...’서 계속

현행 공매도 제도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과 기관이 쉽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인들은 주식 대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도 100여개로 한정돼 있다.

공매도는 거품이 낀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선진적인 투자기법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투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주식시장을 기

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외국인이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가가 오른 종목에 공매도를 걸어 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해당 종목을 들고있는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 공매도는 개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는 하지만 더 전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간, 최저 등급평가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최고로 삼고 중간으로 삼는지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가격만 보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중고폰 업체의 숫자를 대폭 늘리고 제품 상태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등급을 책정해서 일별 가격정보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5월 2일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의 출시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 유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